

도 특사경, 미등록 및 불법 다단계 판매 3개 업체 30명 적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의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전화,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의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고수의 투자 유인 화상품·건강식품 무허가 방문 판매 고액 수당 지급 등 미끼 회원 모집

금전 수취 부당매출 2310억원 넘어

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탐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

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000만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000만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하절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의 동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는 기자

이재명 39% vs 윤석열 41.8% 오차범위내 접전

지난 주 대비 윤 후보 1.8%p 상승

이 후보 0.5%p 소폭 하락 2.8%p차

청년층지지도…尹 15.2%p차 앞서

정당지지율…국힘, 더민주 비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을 2주 연속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으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는 41.8%, 이 후보는 39.0%,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6%, 심상정 정의당 후보 3.0%,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 0.9%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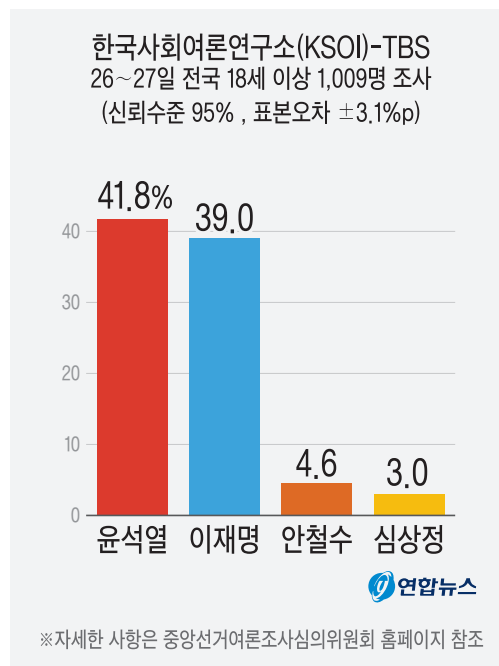
지난 주 대비 윤 후보는 1.8%p 상승했고, 이 후보는 0.5%p 소폭 하락했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2.8%p였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라고 불리는 청년층에서 윤 후보는 20대 38.7%로 이 후보(23.5%)보다 15.2%p 차이로 앞섰고, 30대에서도 윤 후보는 37.5%를 기록해 34.1%의 이 후보보다 3.4%p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안 후보가 10.8%, 심 후보가 9.0%로 다른 연령대보다 제 3지대를 향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부동층은 8.1%였다. 20대(16.2%)에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대구·경북 14.2% ▲학생 14.0% ▲보수성향층 10.1% 순으로 높았다.

지지 여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에도 윤 후보 46.2%로 43.0%의 이 후보와



3.2%p 차이로 오차범위 내의 경합 양상이었다. 2주 전인 지난 12일 조사에 비해 윤 후보는 2.5%p 하락한 반면, 이 후보는 3.6% 상승했다.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후보’를 물었을 때에는 이 후보 39.9%, 윤 후보 36.5%, 안 후보 7.1%, 심 후보 3.6%, 김 후보 2.4% 순이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5%, 더불어민주당이 32.3%를 기록하며 두 당의 격차는 2.2%p를 보이며 지난 주(0.4%p)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벌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위 제9호 안심번호 무상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응답률은 8.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환식 기자

12월중순출간예정

이해 **쭉쭉**
일제 잔재어
이렇게 바뀌요.

● 한세대학교 홍숙영 교수 ●

일본어 잔재 청산을 위한 대중서



정부, 아프가니스탄 주민위해 약 382억원 지원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주민을 위해 3천 200만 달러, 한화로 약 38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를 통해 지원되며, 식량과 국내 피난민 보호, 기초보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취약한 아동과 여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란과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서도 식량·기초보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인구의 95%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내년 중으로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암시장에서 환전상이 지폐를 세고 있다. 국가 통화인 아프가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최근 이곳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시세는 20년 만의 최고치인 96.40 아프가니까지 치솟았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 조정

5만원에서 40% 인상…총 7만원

기준 도비 5만원·시군비 2만원 추가

내년 1월부터 1만2203명 매월 지급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원에서 40% 인상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가 지난 6월부터 31개 시·군에 처우개선비 상향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운송수입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작년 한 해에만 운수종사자 2370명이 전직하는 등 그 수가 약 20% 급감했다.

이에 도는 시·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속 공유하였으며, 수차례의 협의 끝에 내년 1월부터 1만2203명의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도비 5만원과 시·군비 2만원을 합친 7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된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일수와 교통사고 등의 기본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운수 법인회사에서 시·군 요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현장에서 들리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이루어낸 향상된 처우개선 지원금이 도민의 교통수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